



정부, 양돈업 사육 상한선 2천두로 확대

정부는 지난 7월 28일 WTO 체제하에서 양돈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하여 양돈업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 동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 확대와 영세 양돈 농가 보호를 위한 대기업 참여 방지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의견이 분분했던 양돈업 허가 상한선을 현행 모든 1천두에서 2천두로 확대하는 한편 등록 규모를 현행의 모든 200~500두에서 모든 500~1,000두로, 허가 규모를 현행 500두 이상에서 1,000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였다. 또 일반 양돈농가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계열화 업체, 영농 조합 등은 허가 상한선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허가·등록 규모의 양돈업과 양계업을 영위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중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기준을 삭제하여 양돈업의 대기업 참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94년 12월 현재 허가된 양돈 농가는 26개 소이며 등록된 양돈 농가는 174개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지역 3개 대규모 종돈장 오제스키병 감염

농림수산부, 수의과학연구소,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3개 기관에서 30여명의 관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4일간) 경기도 방역계획에 따라 오제스키병의 주요 상재 지역인 경기도 여주, 이천지역의 종돈장 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겨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원농장(대표 마제현), 선진원종(대표 장효순), 제일종축(대표 이에혁) 등 3개 농장들은 양성반응(감염)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종축은 76두를 검사한 결과 69두(90.79%)가, 미원농장은 91두를 검사하여 83두(91.21%)가, 선진원종은 검사한 61두중에 57두(93.44%)가 각각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오제스키병의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과 이병으로 인한 양돈수급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발생한 오제스키병의 발생두수는 1,452두로서 이들 3개 농장들이 보유한 돼지의 5%로도 되지 않은 아주 미미한 숫자이다. 이와같이 이들 지역의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의 감염률이 높은 것은 공기전파에 따른 호흡기 전염, 농가의 질병 감염의 은폐 등과 함께 농장이나 농가단위에서 오제스키병의 감염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PED 등으로 판단, 면역성 강화를 위하여 죽은 돼지의 내장을 갈아 먹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관련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농장의 사육돈중 임상 증상을 보이는 이환축은 살처분 조치하고 임상 증상이 없는 혈청검사 양성축은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태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분양 및 일반 판매를 일체 금지하도록 조치하였고, 모든 종용돈의 검사후 양성돈의 도태, 백신접종,

종돈장 이전 설치 등 발생농장별 조기 청정화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 의심지역의 종돈장과 양돈장에 대하여는 계속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종돈장 출하육돈, 호흡기병 감염 최고 82%에 달해

지난 8월 7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있었던 돼지 질병특별방역대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종돈장 출하육돈의 호흡기 질병 감염율이 최고 82%에 달하는 등 일부 종돈장과 비육장들의 호흡기 질병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감염폐렴의 경우, 지난 3월 5개도의 22개 농장에서 450두를 조사한 결과 조사두수의 82%에 달하는 돼지가 감염되었고, 지난 5월 3개도의 6개농장에서 120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두수의 80.8%에 달하는 돼지가 감염되어 종돈장의 위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축성 비염의 경우, 지난 3월 5개도에서 15개 농장의 305두를 검사한 결과 64.9%에 달하는 198두가 감염되었으며, 지난 5월 3개도에서 6개 농장의 120두를 검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53두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들면서 위축성 비염의 발생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종돈장과 이들 종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들이 세균성 호흡기 질병에 대한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돈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종돈장과 비육장의 차이가 없이 모두 세균성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고 있고, 사료회사에서 배합사료제조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혼합하는 등의 문제 뿐만아니라 이들 농가의 돼지들에 급여함으로써 이들 질병에 대한 내성만 길러 주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깨끗한 청정 종돈을 이용해야 하고, 특히 돼지가 어릴 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백신접종과 항생제 및 소독을 병행하여 폐렴균 뿐만아니라 잡균도 동시에 잡아 폐병변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돈사구조가 낮아 환기불량으로 인하여 돈사내 가스 발생이 심화되어 호흡기 질병의 발병이 심화되므로 돈사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지난 8월 1일 도지사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가축을 돼지 콜레라, 뉴캐슬병, 부루세라병, 결핵병에 걸린 가축으로 대상 범위를 정하고, 가축을 수입하기 전 사전 신고하여야 하는 가축 범위를 소, 돼지, 말, 사슴, 양, 꿀벌로 한정하며, 우편 혹은 유대 수입하는 지정 검역물은 현장 검역시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농림수산부령 제 1205호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공포된 시행규칙 개정령은 금년 1월 5일 공포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법률 제 488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95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714호)에 따라 수입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축산물내 유해물질의 잔류 방지하여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축 질병을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대상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휴약기간 등을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농림수산부 고시 제95-

61호)을 고시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고시에 따르면, 농가는 수의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수의사는 법이 정한 규정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동법이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 기간으로 정하여 「출하제한 지시서」를 발급토록 했다.

동물용의약품별 용법·용량, 사용 금지 기간, 휴약기간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지 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금년도 축산단지 47개소 최종 선정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신규로 조성할 축산 단지를 모두 47개소로 선정하고 이들 단지에 총 3백 50억 5천 8백만원의 지원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중 양돈 단지는 22개소, 한우 13개소, 낙농 4개소, 양계 8개소가 각각 선정됐는데 이들 각 단지에 돼지 2백 18억 8천 8백만원, 한우 48억 1천 8백만원, 젓소 23억 3천 5백만원, 닭 60억 1천 6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각 도별로는 경기 92억 3천 1백만원, 강원 57억 9천 5백만원, 충북 12억 9천 5백만원, 충남 37억 4천 7백만원, 전북 25억 3천 3백만원, 전남 31억 3천 8백만원, 경북 26억원, 경남 10억 1백만원 등이 지원될 축산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같이 각 축종별·도별 지원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 추진될 축산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축산물 무역역조 여전

농수산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농림수산물 총 수출액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기간의 3.9% 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4.3%로 나타났다.

또 수출 증가율면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28.9% 증가한 6천8백90만불을 시현했는데 이는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면에서는 수출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같은기간의 4억1천9백90만불보다 39.1% 늘어난 5억8천4백20만불어치 들어왔다.

이같이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국내 육류 생산 감소로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업 평가제 도입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정부는 각 지방 단체별로 실시되는 농림수산업 부문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차등 배정 및 편성해 주는 「농림수산업 평가제」가 지난 8월부터 실시되었다.

정부는 '98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과 2004년까지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 등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농어촌 발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농림수산업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잃어 왔고 선입관이 팽배한 현실에서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 이기주의만 팽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육류도체등급제, 소매단계까지 확대 적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등급제가 내년부터 소매단계까지 확대시행될 방침이다.

지난 7월 31일 농림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도매단계의 육류도체등급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

라 내년부터 이를 정육점, 식육판매소 등의 소매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식육판매업소에서 육류를 진열·판매하는 방법을 현행의 「등급별 또는 부위별」에서 「등급별 및 부위별」로 등급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시설 개선 등을 서둘러 추진, 가능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잔반 퇴비화에 치중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 음식물 쓰레기(이하 잔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교도소, 학교 등의 공공 기관의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잔반 감량화 처리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1%에 불과한 퇴비화율을 오는 200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한편 제조업체의 난립과 품질에 불신을 받고 있는 잔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속 발효기의 품질과 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KS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잔반은 퇴비화 되기 전에 사료로서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아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에서 겪고 있는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퇴비화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서 잔반의 사료 활용에 대한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인천시, 수입 곡물에 컨테이너세 부과

인천시는 지난 7월 31일 지방 세수 증대, 확보키 위해 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항을 이용하는 벌크(bulk)화물 특히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물의 70%에 달하는 곡물, 목재 등에 대해서 오는 97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컨테이너세를 톤당

1천원씩 내년부터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차후 수송 도로를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곡물은 연간 911만 2천톤(93년 기준)으로 연간 부과되는 컨테이너세는 9,112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세, 교통세, 지방도로 이용세 등을 부과할 경우에 타 축종에 비하여 곡물을 주원료 생산에 이용하는 양계와 양돈 농가들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여 양축농민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새로운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소수를 위해 다수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 축산 분뇨 수중펌프로 처리

가축분뇨를 수중펌프, 호기성 발효균, 분뇨저장탱크로만 처리할 수 있는 처리법이 최근 일본에서 개발돼 현재 실용화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농가적용 가능성 시험단계에 있어 양축농가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지대 환경공학과 이명규교수가 일본에서 개발 국내에 적용시험을 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법은 급속부숙화방식이다.

급속부숙화방식은 노와 분을 일정비율로 저장탱크에 투입, 수중펌프에 의해 연속적으로 폭기하는 처리법이다.

